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野 “국민에 대한 거부”

야6당·시민단체, 강력 규탄
이재명 “윤 독주·오만 심판”
“21대 폐기시 22대서 재추진”
대통령실 “삼권분립 위반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에 대한 거부”라며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권 일각에선 “탄핵 사유”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6당과 시민단체 ‘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을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걸 스스로 자백한 거 맞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 정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에 수많은 시민과 야당들, 심지어 일부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

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한다”며 “벌써 10차례다.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배가 넘는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말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도 높였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원 당선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지지를 받는 채 상병 특검의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대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레임덕으로 가는 길이 가속화되고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여 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7당은 오는 25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가결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21대 국회 재적의원 295명(296명 중 구속기소된 윤관석 제외)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3분의 2 이상인 197명이 찬성하면 특검법을 재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총 10개 법안에 대해 여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 △특검 취지 부적합 △수사 공정성 담보 불가 등을 꼽았다.

정 실장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강성 당원’ 강화 방안 본격 추진

각종 경선서 권리당원 비중 확대
일각선 ‘팬덤정치 부작용’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회의장 이변 사태’를 계기로 ‘당원 중심 정당’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강성 당원 강화가 지난 4·10 총선 압승의 핵심 동력이었던 중도층 민심과는 이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1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은 당내 선거에서 권리당원 의사 반영 비중을 높이는 등 당원권 강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후 권리당원들이 집단 탈당하고 당 지지율이 하락한 데 따른 대책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경선 후 탈당 신청자는 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 원인이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있다고 보고, 당내 선거에서 당원 의사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는 7월 차기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권리당원 의사 반영 비중을 높이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시·도당위원장에 기초의원·광역의원·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이 달려있는 만큼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50대 50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의장·원내대표 선거 투표에 당원을 참여시키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석 의원은 의장 경선에서 권리당원 의견을 10% 반영하는 ‘10%룰’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제안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당원들에게 당내 경선 투표권을

주는 안을 제안했다.

권향엽·김태선·윤종균·이기현·정을호 등 초선 당선인들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도 당원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의장 경선 후 당심을 달래기 위해 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안을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22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원권 강화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권리당원 권한 강화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알고 있다”며 “분임토의 주제가 ‘유능한 민주당 시민의 민주당’인데 당 체제 정비와 법률적인 현안들을 포괄하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선 이런 당의 움직임에 우려 섞인 시각이 적지 않다.

강성당원인 ‘개팔’ 입김에 당이 휘둘리는 팬덤정치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 욕구와 건전한 정치 참여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한쪽에 치우친 강성 당원들의 주장만 반영된다면 당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것이란 우려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들이 실효 행사를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특정인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강성 팬덤의 주장이 전체 당원의 목소리인 것 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당원권 강화 작업이 중도층 이탈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지금 탈당하겠다는 반발하는 극성당원들을 다독인다고 이런 저런 수습책을 선부르게 추진하다가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 동부권 당선인들이 21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철현 의원실 제공

전남 동부권 당선인들 “상생·협력으로 공동번영”

여순특별법 개정 등 6대공약 발표

전남 동부권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5명은 21일 전남 동부권의 상생·협력으로 전남 전체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읍)·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읍)·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조계원(여수읍)·주철현(여수갑) 당선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동부권 6대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비서실장에 광주출신 광대중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는 당대표 비서실장에 광주 출신의 광대중(사진) 전 개혁신당 대변인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광 비서실장은 자영업자이자 정치칼럼니스트(필명 봉달호)로, 전남대학교 총

이들은 “전남 동부권은 전남의 22개 시군 중 동부권 3개 시와 6개 군에는 전남 전체 인구 180만 명의 절반인 89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남 경제생산 실적의 82%를 점하고, 서부권보다 8배 많은 연간 5조 8000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전남에서 동부권의 경제적 위치를 언급했다.

이들은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핵심 기관뿐만 아니라,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이 전남 서부권에만 위치해 ‘전남 동부권 소외론’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6대 공동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6대 공약은 △윤석열정부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 및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전용 고속철도 건설 △남해안·남중권 경전철 건설 △광양만권 이차전지 기회 발전 특구 지정 및 조속 추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흥분원 유치 등이다. 이들은 “총선으로 확인된 국민 명령을 실천하는데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개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고, 2027년 대선에서 개혁신당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는 허은아 대표의 비전을 실현하게 위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